

# “삭제 지시·월북몰이 안했다” 민주 서해 피격사건 총반격

노영민·박지원·서훈 기자회견 “사건 은폐” 감사원 발표, 진실 왜곡  
“故 이대준 씨 월북 몰아도 실익 없어...국정원, 자료 삭제할 바보 아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도 “진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어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출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냐”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 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등을 해서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은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닌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간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흥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탈북 여민 복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을 ‘동해 흥악범죄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민주당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월북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與 최승재 “대통령, 국회에 유감 표명하시라”

본회의 자유발언서 언급...與 의원, 대치 정국서 ‘이례적’ 발언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인과 책임을 떠나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회에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시라”고 권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대의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검찰 수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여야 간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포용력을 발휘해 국회에 유감 표명을 권유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의 총책임자로, 국민을 향한 책임은 막강하다. 국익과 국민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없고, 여당 또한 포용력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금해야 한다”며 “여야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민주 “감사원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할 것”

尹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회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위원장인 박병계 의원이 대표발

의하고,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약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해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대통령과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골자로 한다.

그간 내부 모집했던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감사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홀대 심각”

서삼석 의원, 농어업 예산안 지적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양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면서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식품부 식량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하는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

면서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